

최대 승자는 '10년 외교 갈등' 풀어낸 오바마

■ '역사적 타결'이란 핵협상 승자와 패자는

이란과 '안보동맹 강화' 러시아 무기 수출 길 열려

'반이란파'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는 입지 흔들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협상의 승자와 패자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핵협상을 지지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핵협상 타결의 승자로 손꼽힌다.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공화당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치적 업적을 위해 성급하게 미국의 안보를 희생했다'는 공세에 시달리고 있지만, 10년 이상 지속된 외교적 갈등을 풀어낸 것만으로도 최대 승자라는 점에 이견이 별로 없다.

이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이란의 협정 위반시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 등을 합의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다수당이 공화당이 의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어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의회 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핵협상을 지지해온 민주당 의원들도 한때 제기됐던 당내 비판 여론이 이번 타결로 잠잠해짐에 따라 역사 미소를 짓고 있다.

이란과 이란의 동맹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최대 수혜자들이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됐던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무도화의 여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WP는 분석했다.

미국과 신냉전 관계를 형성한 러시아는 핵협상 타결 덕분에 이란과의 안보동맹을 가속화할 수 있어 우군을 확보한 셈이 됐다. 이란이 러시아제 무기 수입을 늘릴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엔 그동안 제재로 가로막혔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늘림으로써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WSJ는 진단했다. 중국은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 (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육상 송유관·가스관을 건설해 이란산 에너지를 직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또 이란을 중동의 잠재적인 동반자로 삼아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공화당 등은 이번 핵협상 타결의 패자로 분류된다. 특히 이란 핵협상에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이스라엘과 미국 내 친(親)이스라엘 유대계 로비단체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는 누구보다 강하게 반발하며 패배의 쓰라림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춰온 사우디도 이란의 원유시장 개방으로 최대 산유국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로서는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부상으로 중동 내 각종 분쟁에서 사사건건 부딪힐 우려 또한 커졌다. 미국 공화당은 이란과의 협상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데다 오바마 정부의 승리에 정치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을 쓰라린 패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젠 북핵만 남았는데...

美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북과 대화" 입장 확인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대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존 케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문제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이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북한 핵프로그램 전체를 겨냥하며,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로 귀결된다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답변했다.

케리 대변인은 "이란 핵협상 타결은 우리가 오랫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데다 오바마 정부의 승리에 정치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을 쓰라린 패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력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바 있다.

케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맞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결정적 요소들을 계속 가동하면서 대화를 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케리 대변인은 "비핵화는 최고의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법으로 추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5개국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 전환의 결정권을 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달 30일 아스펜 발과 경제개발이라는 '빙진 노선'을 내세우며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방미한 류엔둥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에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노력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바 있다.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하는 日 집권당

"징용은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잘 알려야" 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 산업시설에서 조선인이 강제노동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일본 집권당 자민당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국제정보검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열어 앞서 사토 구니(佐藤 邦)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부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했다고 언급해 생긴 논란을 의제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당시 발언이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인정했다는 오해를 낳았다'고 성토했다. 또 '징용은 강제노동이 아니다'는 뜻을 제대로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을 검토했다.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면 강제노동을 부인하려는 일본 내 움직임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사토 대사는 이날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노역한 수많은 한국인과 여러 국민이 있었다'(-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the harsh conditions-)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관방장관은 해당 발언이 정공방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차원이며 ILO(국제노동기구)가 정의한 '강제노동'(forced labor)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LO는 일본이 전쟁 중 한국과 중국 노동자를 대거 동원해서 일 시킨 것이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1999년에 이미 보고서로 밝혔으며 같은 견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야당 "헌법 위반이다" 일본 중의원(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의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위원장(자민당 소속, 오른쪽 두번째)이 15일 "헌법 위반이다" "심의가 미흡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날 안보 법안은 여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日 '집단지위권 법안' 중의원 소위 통과

아베, 야당 반발 속 강행 처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15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

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 등 주요 야당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료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내각이 마련한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연합뉴스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